

2021년 계양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 10. 18.부터 10. 29.까지 10일간 3개반 16명이 참여하여 2018년 3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계양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59건(본처분 37건, 현지처분 2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4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정 환수	환급 금액
계	73	51	22	73	33	32	8	7/183,428	6/160,960	1/22/468

2021년 계양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절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업무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계양구 ○○과는 “20**년도 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분야 응시 자격 등을 공고, 총 00명이 응시하였고, ○○과는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 이후 3명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평정표에 따라 20**.**.*. 최종면접을 시행하였다.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르면 ‘기본자질 및 조직적응력’ 등 4개 평정분야 총 10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10)·중(8)·하(6)로 평정하고 소방관련 자격증에 대한 10점의 가점을 포함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① 위원의 과반수가 10개 평정요소 중 4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과는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A, B, C, D를 20**.**.*. 최종 합격자로 결정·공고하고 이후 1순위 A가 임용을 포기한 사유로 예비합격자였던

5순위 E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합격자 5명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표를 확인한 결과 4순위 D는 면접시험위원 F와 G가 평가항목 3번에 대하여 “하”를 부여하였고, 5순위 E는 면접시험위원 모두 3번 항목 “하”, 면접시험위원 F와 G가 4번 항목 “하”, 면접위원 F와 H가 6번 항목 “하”를 부여하여 2명 모두 불합격 대상임에도 이들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양구 ○○과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면접시험 합격기준을 설정하여 면접 시험표에 명시하였음에도 정작 면접전형 단계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채용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라 1.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구성하되, 이 중 2/3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동 지침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의 시험위원 회피·기피 기준 및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시험위원) 제4항에 따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일반임기제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근무기관 상급자를 제척하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면접 결과 해당 면접위원과 근무관계가 있던 응시자 중 다수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계양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관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¹⁾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고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후 일부를

1) 「지방세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한 경우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되,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6.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의 본점사업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 등 00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미흡으로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농업법인 취득부동산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00년 이내인 20**.**.*. 계양구 ㄱ동 ***-**-**번지 외 00필지 ****제곱미터를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 토지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계양구 ○○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및 현지출장 확인 등을 통해 기 감면된 부동산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예기간 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실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미흡으로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과점주주 취득세 관리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청 ○○과에서는 주식회사 ◇◇ 등 00명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20**.**.**, 증자방식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 부적정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매²⁾를 통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³⁾ 제3조제1항과 제4항 및 제3조의5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하 “대항력”이라 한다)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⁴⁾고 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21조 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유치권⁵⁾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채권금액도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적인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와 민사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매를 포함

3)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에 규정되어 있음

4)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2010.4.20. 조심2010지0210)

5)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낙찰대금뿐만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금액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는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및 배당표 등에서 확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 부족세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계양구 ㄴ동 ***번지 *동 **호 A 등 00명의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대도시 법인중과 등 00건, 취득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 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 등 00개 사업장에 대한 20**년 ~ 20**년 주민세 00건,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주민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은 비과세하되 1년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자료와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계양구 ㄱ동 *-*번지 ●● 등 00명의 재산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재산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위반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의 고용·알선 및 호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업무 매뉴얼(2017.6월)에 따르면 동일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차수 적용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20**.**.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된 ○○노래연습장의 경우, 적발된 날 이전 최근 1년 기간 중 20**.**. 동일한 위반행위 주류 판매·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3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하여야 함에도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1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하였으며,

20**.**.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된 □□ 노래연습장 역시 적발된 날 이전 최근 1년 기간 중 20**.**.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1차 위반 기준을 적용, 1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문화재수리공사 부적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이나 토지 내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하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사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59조(벌칙)에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별표8]에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 문화재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20**년 시 지정문화재인 ◇◇ 제*차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수리 공사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산림조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 법 시행령 부칙에 의한 20**.**.*.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20**.**.*)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20**.**.*)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그 결과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등 문화재수리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문화재수리보고서 접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이하 “수리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46조(시정명령 등)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법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20**.**월 문화재수리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문화재수리업자가 동 시스템을 통하여 수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군·구 감독관)의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구에서는 문화재수리 공사를 발주한 경우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수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수리보고서에 수리대상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또는 인천시장에게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관청(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⁶⁾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18.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된 국가 및 시 지정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공사 00건에 대한 수리보고서 접수 및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 정비공사’ 등 00건의 공사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리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최대 *년 **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도 수리보고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 공사가 완료된 국가지정문화재 ‘◇◇ 0차 탐방로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법정제출일인 20**.**.*일 지연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도급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문화재청장 및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수리보고서를 조속히 접수·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발주하지 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주의 요구

제 목 비 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행정재산인 비회관을 계양구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위·수탁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⁷⁾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 ②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는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 ㄴ회관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 간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로 하여 ㄴ회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일인 20**.**.**,부터 00년 00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갱신 및 평가 절차 없이 ◆◆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 때

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계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2. 위탁재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 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 수탁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무대행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10조(지도·감독)에도 위탁자인 계양구는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 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 뿐 만 아니라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위탁재산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탁재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기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법·부당한 내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회관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재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상황을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에 따르면 공단이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공단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대행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의 정산은 사업 종료 후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전(307목)’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 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정산검사) 및 제24조(감독)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8) 2021.1.12 「지방재정법」(2021.7.13. 시행) 개정

-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ㄴ회관을 지방공기업인 ◆◆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으로부터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 위탁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ㄴ회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탁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문화교양센터 수강료에 관한 사항

ㄴ회관에서는 계양구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문화교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관련조례에 1시간 5,000원 범위내로 하고 수강인원, 성격, 방법 및 공공성과 수익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1시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수강기간(기본 3개월)의 수강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강좌별 수강료로 분기별 60,000원~100,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촉진과 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ㄴ센터 운영내규」 제8조(수강료 할인) [별표1]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인)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양구와 ◆◆이 체결한 「◆◆ 사업대행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5조(사용료 징수)에도 수탁자인 ◆◆은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회관 문화교양센터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감면(할인) 기준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관 사용조례」에 문화교양센터 수강료 징수 기준을 1시간 5,000원 범위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강좌 시간, 성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없고 있으며, 수강료 감면(할인) 기준을 조례가 아닌 수탁자인 ◆◆ 내규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관 사용 조례」 제8조(사용허가)에 따르면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에 따라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행사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허가)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한, 조례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따르면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주최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를 1. 비영리 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따라 회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구청장은 그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양구와 ◆◆이 체결한 「회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제13조(관계 법령의 적용)에도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ㄴ회관 관리수탁자인 ◆◆에서는 ㄴ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양구에서는 관리수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전시·공연·행사에 대해 실제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 없이 계양구를 사용자로 하여(단체의 대표자 계양구청장) ◆◆에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전시·공연·행사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인지 면밀한 검토 없이 계양구의 요청 공문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였다.

이에 대해 계양구에서는 전시·공연·행사는 계양구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조례 제12조 제3항 제2호로 판단,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계양구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행사임을 제출하였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양문화회관 사용 허가는 신청자가 아닌 공연, 전시, 행사를 기준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 제12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면제 조건인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해 시 또는 구의 후원 기준을 문화예술단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공연·행사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 또는 구의 후원’의 기준 역시 보조금 지원 여부가 아니라 계양구 명의로 후원한 행사·전시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일부 행사의 경우 전시·공연·행사에 대해 계양구 명의로

후원한 행사·전시 등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없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용료 면제 신청하였고, ㅅ센터 종강식의 경우 ㅅ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사용료를 면제 신청하였으며, G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의 경우 ㉠㉠의 인천예술인 긴급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조례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여 ◆◆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면제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이 경과한 ㄴ회관 위탁계약을 평가 후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 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시고,
② ㄴ회관 문화센터 수강료 징수 및 감면(할인) 기준을 「계양구 ㄴ회관 사용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ㄴ회관 운영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ㄴ회관 위탁사업비 정산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 및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 ◆◆ 및 ○○을 ◇◇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

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로서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에서 ◆◆ 및 ○○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 동의,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 및 ○○을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인 ◇◇에 수익계약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양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별하여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고, ◆◆ 및 ○○의 수탁기관인 ◇◇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근거 규정으로 위임·위탁의 종류를 구분·나열하고 있을 뿐 이 조항 자체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위탁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동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및 규칙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및 ○○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동 사무의 위탁 시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을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을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및 ○○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한 조항이 ◆◆ 및 ○○을 민간위탁할 때에만 따르면 된다는 계양구의 주장은 수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먼저 지정한 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유가 없으며,

이전 계양구에서 ◆◆ 및 ○○을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탁기관을 임의적으로 축소시켜 기타 민간단체 및 법인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행정사무 위탁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사무를 [별표1]에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회계(보조금, 후원금) 등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중 간접비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간접비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사회복지시설 00개소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간접비 사용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관련부서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산보고서 제출(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군·구와 법인,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같음하며, 만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를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바, 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사회복지시설(법인) 00개소에서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 31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였으며,

계양구 ▲▲과,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법인) 00개소로부터 기한 내 제출된 보고서를 뒤늦게(최대 ***일이 경과 후) 승인 처리함에 따라, 승인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공개되는 시점 또한 지연되는 등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확보를 저해시켰다.

또한, 계양구 ○○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로부터 비전자문서로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3개월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20**년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20**년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00일에 한하여 공개하는 등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비율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서’ 제출·공개 규정을 준수하여 추후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통상 4주의 제출기한을 부여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며,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제6항을 근거로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7항,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33조~제107조)을 근거로 재산조회, 압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만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내역 중 00건의 의료 급여 부당이득금 000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00건은 납부통지일로부터 **일~***일이 경과 된 시점까지 부과금 전액이 징수되지 않았음에도, 독촉 이후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징수절차(독촉기한 내 미납 시 즉시 압류예고 및 압류처분,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등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단, 17년까지 3개월 경과시점 1회에 한해 점검 실시)하여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청 ○○과에서는 다수의 장애인보조기기 점검 건에 대하여 구입비용 지급 후 1·2차 모두 기준일을 초과하여 사후점검(지급일로부터 최장 ***일 경과 후 점검)을 하였으며, 0건은 구입비용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1차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구입비용 지급일로부터 00일~00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1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0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지원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조건제시유예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예외적으로 군·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생 등 시험준비생, 실업급여 수급자, 20세 이상 초·중·고생 및 초·중·고·대 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선정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침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개월, 연2회 까지 제시유예자로 선정가능하나,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료(예상)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세 번째는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자활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00명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함에 있어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심사 시점의 진단결과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가 아닌, 과거의 진단이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재발급하여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선정하거나, 사실확인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건제시유예 신청대상자 중 H와 J는 20**년~20**년까지 총 0회~0회에 걸쳐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되었는데, 해당기간에 제출된 두 대상자의 진단서(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조건제시유예 신청 시점의 치료(예상)기간,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누락된 채, 동일 의료기관에서 병명과 치료의견은 별다른 변경사항 없이 발급년월일만 변경하여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관련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총 00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였고,

조건제시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되기 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

토하여 유예결정처리를 해야 함에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00일~00일이 경과한 이후에 유예기간을 소급하여 결정처리를 하였다.

특히, 조건제시유예는 군·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K외 00명에 대하여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조건제시유예를 결정하고,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별 상담내역에 기록·관리하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 [시정] ①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출서류 및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해 조건제시유예자 선정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민법상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급여관리자는 부양의무자(자부, 사위, 계부모 포함),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만일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며,

급여관리자 지정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부당 사용·관리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을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동장은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복지급여가 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급여관리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되, 급여관리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나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직계비속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한 모두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장은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상의 공통점검 항목(통장소유자, 인출형태,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주요 사용처,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수급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가입여부)을 중심으로 급여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시설 수급자의 경우, 병원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금 유무 등 별도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수급자 및 급여관리자의 인적사항, 세부 항목별 점검사항, 조사일, 조사자(업무 담당자), 확인자(동장)의 서명이 날인된 점검표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통장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하고, 통장거래내역상 급여관리자 혹은 제3자에게 입금된 사항이 기록되어있음에도 사용자, 사용내역 등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자 L의 경우, 급여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면서 해약에 따른 지급보험료를 20**.**.* 급여관리자에게 지급하였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 또한 환급금 만기 수익자가 급여관리자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 [시정] ① 급여관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인출·사용된 건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아울러, 향후 급여관리 점검 소홀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아동보호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원금 관리분야의 ‘후원 제한’사항으로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취약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00개소 후원금 모금현황 확인결과,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0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 보호자 00명으로부터 총 0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일부 후원자는 00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으며, 상당수의 후원자들은 월 00천원부터 월 000천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최대 000천원을 모금하는 등 이용아동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계양구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이러한 후원금 모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 제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권고]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상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정수물품 취득 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8개 부서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주관 실·과장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물품운용관은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정수 배정요청서를 제출하고, 물품관리관은 정수 배정요청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부서(각 물품운용관)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정수 승인' 받은 물품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은 최초 정수관리대상물품 소요 경비 예산 편성단계

에서 정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18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총 000건 000천원에 대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 구입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수물품을 취득·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과, ▲▲과 등 총 00개 부서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 총 00건 000천원에 대해 구입 후 물품관리관에게 정수 승인요청 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과는 정수대상 물품 00건에 대해 정수승인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 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정수 승인 요청 없이 취득·사용한 사실이 있다.

한편 계양구는 「20**년도 계양구 종합감사」 당시 20**년~20**년 동안 총 00건 000천원에 대해 계양구 ▽▽에서는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에서는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 없이 구입한 후 정수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승인 처리하였으며, ■■■과, □□□과는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정수물품을 구매한 후 정수 승인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계양구는 20**년도 종합감사 시 정수물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주의 요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법령 및 조례를 미준수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발생·지적되는 정수물품 관리 소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정수책정 및 구입 절차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수관리대상물품 소요 경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정수 배정 여부 심사를 철저히 하여 정수물품 취득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를 미 준수 할 시 예산 반영에 제외하여 사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정수물품 구입 행위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① 정수승인관리대상물품 취득·사용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부적정이 지속됨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사용 업무에 대하여 절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령을 위반하여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소홀히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 기술사용료 미계상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은 발주부서는 신기술 특허 공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해당 공법이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보유자에게 공법의 단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후 공법 비교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법 간 단가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법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발주부서와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에는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하여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의 기술력 또는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을 제공받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로 하여금 하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부서는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기술사용료와 하도급 부분을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시 명확히 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기술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담을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기술사용료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착공 후 낙찰자와 기술보유자의 하도급계약 신고서가 접수될 때에는 협약서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상된 기술사용료는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 후 총 00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중 0건을 제외한 00건은 공사 원가 계산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ㄷ 보수보강공사, ㄱ 보수공사, ㄷ 가동보 설치공사’ 등 3건은 관련 특허 사용협약 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기술사용료 요율을 0% 로 체결하였다.

기술사용료 요율이 명시 되어 있는 나머지 기술협약서의 제3조(기술사용료 등)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신기술공사비(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에 요율과 낙찰율(80%)을 곱하여 산출하되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준공 전 ‘갑’이 산정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양식과 맞지 않는다.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계상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지원만 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신기술(특허)이 적용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기술보유자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나 결국 계약구에서는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만큼은 특허권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향후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반드시 명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계약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특허 등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인이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계양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로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 전통 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설계 용역 시 주요 자재 선정 과정은 업체별 제품비교 자료심사 실시(20**.***)하고 추진위원회 및 상인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자재 선정을 위해 관련 자문 기술자 00명에게 서면심의(20**.***)하여 제품의 제작 일정과 타 공정과 연계 설치가 용이하고 효율적이며 공사 책임 범위가 명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특허 제품이라는 이유로 단일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의 아케이드 물품인 조립식구조물 0종과 ○○의 막 구조물을 대체·대용품이 없는 특허 제품에 해당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양구에서는 교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특허 제품을 이유로 별도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대체·대용이 가능한 유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대용품이 있는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구매 요청하여야 함에도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경쟁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아케이드 조립식구조물 및 막구조물에 대한 대체·대용품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다.

2.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절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901호)」 제18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이 명시된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고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 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양구에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구매설치 납품일로부터 5년 동안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물품 계약에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 받았으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조립식구조물 및 막구조물 구매설치 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정기 및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협의) 업체 행정처분 등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등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⁹⁾을 통해 하도급제한 위반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적발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일괄 하도급 등 법 위반 혐의업체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고 있다.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 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¹⁰⁾는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원·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별점통합관리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정부인트라넷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정보의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1항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인천광역시에서는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구·군으로 위임

또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계양구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주)○○○, (주)○○○, (주)○○○, ○○○(주)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 제3호 및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시설장비) 00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재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3호,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제1항 [별표6]에 따라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의 재하도급 위반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4. 직접시공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책임 있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의 직접시공 위반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검토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통보 업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행정 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우수조달물품(전광판) 구매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계양구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전광판 제작·설치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것을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우수조달물품을 사유로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지방계약예규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고, ○○과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계양구 △△과 외 0개 부서에서는 전광판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시방서에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를 명시하여 재무과로 계약 의뢰하였다.

그러나 △△과 외 0개 부서에서 시방서상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를 명시한 사항은 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를 설계서(시방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지방계약예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요청한 사항이며, ○○과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의 수의계약 의뢰 사항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함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부적정하게 선정하였다.

특히 세부적인 수의계약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과에서는 20**년과 20**년에 ㄱ 전광판 제작·설치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상 시방서에서 지정한 물품과 기존 1개 물품과의 비교 사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다수의 전광판과의 객관적인 비교 검토가 아닌 해당 물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기술적 특징만을 그렇지 않은 기존 물품과 비교한 것에 불과한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1년여의 기간에 0건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물품을 제작·설치 하면서도 각기 다른 우수조달물품을 지방서에 반영하여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년 □□과 ㄴ 전광판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인증서를 보유한 0개 업체의 기술인증, 정부포상, 유지보수 기간 등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비교표는 업체명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물품의 유리한 항목만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선정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계약예규에 따른 지방서에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물품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계약예규를 위반한 사항이며,

비교표 상 0개의 우수조달물품 인증서 보유 업체 중에는 감사대상기간 중 구매한 다른 0건의 전광판 제작·설치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다른 0건의 전광판 제작·설치 관련 수의계약 요청 사유의 상대적인 미흡함이 확인되는 결과도 초래 하였다.

한편 20**년 ◇◇과의 ㄷ 전광판은 당초 특정물품이 지방서에 명시된 상태로 계약의뢰 되었으나, ○○과에서는 조달청으로 계약요청 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서상 해당 물품의 인증번호를 삭제한 후 계약 요청하였고, 조달청에서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초 ◇◇과에서 ○○과로 계약 의뢰한 사항은 지방계약예규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서상 특정 물품을 명시한 것으로, ◇◇과에서는 실시설계시 특정한 물품이 지방서에 명시되지 않도록 내역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예규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을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 계약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 대상 물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계양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감사대상기간 중 하도급계약이 통보된 79건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부서에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부분금액은 해당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 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것이며,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서 및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사항과 관련한 ○○과의 하도급계약 적정여부 검토 요청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계약 금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과에서는 검토 대상 항목의 누락 여부 등 검토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통보된 00건의 하도급계약 중 △△과 및 □□과에서 검토한 00건은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하도급 계약 통보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1.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 한다.) 제98조(공사 완료의 공고 등)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 미 이행

계양구에서는 ‘작전동 ***-*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0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열람공고, 실시계획인가·고시 등)를 이행하고 공사추진 완료(준공) 하였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인가

부서에 실시계획 인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미 공고하여

도로 점용(「도로법」 제39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관련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로 공용 개시가 된 시점부터 도로점용 관련 규정 적용) 규정(허가, 점용료, 변상금 등 각종처벌 규정 등)을 적용 할 수 없고 또한 실시계획인가 반복(변경 인가) 이행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지연 준공으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합병 등 미 이행

계양구에서 ‘ㄱ 시장~ㄴ 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00건 공사를 추진 하면서 000필지 00,000㎡(000평)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 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 목 변경 등 신청을 하지 않아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변경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 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공고 및 토지 지목 합병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ㄱ 전용구장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계양구에서는 20**년 **월 ■■■와 계약을 맺고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ㄱ 전용 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가. 자립식 옹벽 가시설(거푸집) 설계변경 관련

‘ㄱ 전용구장 조성공사’에서 비탈면 절토부 안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장 000m 자립식 옹벽은 경사면 상부에서 천공 후 선단 확대 H-Pile를 근입한 뒤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말뚝을 시공하고 삽입된 H-Pile을 엄지말뚝으로 이용 토류 판에 설치한 다음 비탈면 굴착 완료 후 철근배근,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공법으로 설계도서에서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설계도서에는 콘크리트 타설 위한 가시설이 합판 거푸집 0회 0,000m²(1m²당 00,000원)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장 감사결과 시공비가 저렴한 유로폼 거푸집(복잡)으로 시공함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실정 보고를 통한 설계변경(공사비 절감 등)을 하지 않아 약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자립식 옹벽 철근 가공조립 설계변경 관련

자립식 옹벽 시공을 위한 철근 00.00톤에 대하여 가공과 조립(보통)을 각각의 공종으로 분리 없이 가공 및 조립 공종으로 설계도서에서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시공에서는 옹벽 하단부 00톤에 대해서만 가공(간단)하여 조립하고, 상단부는 장철근(가공 없이 조립)으로 현장 가공 없이 조립(시공)함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정 보고를 통한 설계변경 (공사비 절감 등)을 하지 않아 약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가설사무소 중복 계상 관련

토목공사(운동장) 및 건축공사(관리사무소)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가설사무소 및 창고에 대해 설계도서에는 토목 및 건축분야 각각 반영되어 있으나, 토목 및

건축 분야 착공과 준공이 동일하고 시공사도 사무실 및 창고를 각각 한 동씩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 보고를 통한 설계변경(공사비 절감 등)을 하지 않아 약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지여건 등과 설계도서가 부합 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 설계변경(감액 000천 원)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7개 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 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지적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감액 소홀

계양구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경계 펜스, 차량유도 등, 라바콘’ 등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 간판 등의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약 00건 00백만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소홀

계양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 마다 편차 있는 사용 내역 등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ㄴ동 *-*번지 일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안전화 1켤레를 0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 년도 ‘ㄷ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는 안전화 1켤레를 000원에 구입하는 등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 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구입한 000개의 안전화 평균 구입비는 000원으로 계양구 무기계약직의 안전화 평균 구입비와 비교 적용할 시, 약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또한 안전모에 대하여는 ‘ㄷ동 ***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개당 0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 년도 ‘계양 ㄹ 보수보강공사’에서는 개당 000원으로 구입하는 등 최근 3년간 해당 건설공사에서 안전모를 구입한 갯수는 000개로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인터넷)으로 구입 시 안전모 적정가인 000원으로 구매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약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안전 장구 지급에 따른 지급대장 등을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과 연계 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 및 정산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사진만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약 00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당해 년도 건설사업 설계기준(안) 작성에 안전관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수록하여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시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권고

제 목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계양구 ○○과에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조명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 공원등, 지하보·차도등, 보안등)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의 업무수행 절차 개선 필요

계양구 ○○과에서는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공원등 포함)과 보안등에 대하여 고장신고 등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 및 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년도 정비실적 포함)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공사물량과 관급자재 구입물량을 산출할 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시공물량 또는 민원접수에 따른 정비대상물량 등과 같은 객관적인 물량산출기준 없이 당해 연도 예산액에 맞춰 공사비와 관급자재비를 산출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매년 00~00백만원 가량을 구입하여 시공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자재청구를 받지 않고 일괄 지급하였으며, 시공자가 지급받은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공지시의 경우에는 서면¹¹⁾지시가 아닌 구두 또는 온라인으로 지시하다 보니 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에 시공지시별 정비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시공지시사항의 조치완료 여부와 정산내역을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사 준공 후 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번호별 보수이력과 자재 입·출고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등을 차기년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예산 중복집행의 우려 또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의 업무수행 시에는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인 공사물량과 관급자재 구입물량을 산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구입한 관급자재는 서면 시공지시와 함께 시공자에게 지급하거나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파악된 필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 후 시공자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 준공할 때에 제출하도록 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번호별 보수이력과 자재 입·출고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 정비결과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의 분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차기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 피드백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로조명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2. 도로조명시설 양방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검토 필요

계양구 ○○과에서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에 대하여 장제로, 경명대로 등 대로 위주의 차량 순찰과 주택가 골목길 등 동별 도보 순찰을 병행하여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과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야간 순찰과 지역주민의 신고에 의존하여 고장난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을 적출해 보수하는 데에는 넓은 관할구역 및 교통상황 등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가로등과 공원등의 경우에는 제어함 내부에 양방향 자동 점멸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원격감시·제어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경우에는 주로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취약지역에 설치되는 용도 특성상 가로등, 공원등과 같이 1개의 제어함에 여러 개의 등주가 묶여 있는 그룹별 제어방식이 아니라 1개의 제어함에 보안등 1개가 일대일로 설치되어 있어 대당 000천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양방향 자동점멸기를 설치하기에는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대당 00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방향 GPS 점멸기를 설치하여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연월일시를 보정하여 전자식 자동타이머로 점·소등하는 방식(원격감시·제어 불가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에 비해 가로등, 공원등의 양방향 자동점멸기 설치율이 00%로 매우 낮은 편이며, 보안등의 경우에는 양방향 자동점멸기 설치율이 0%인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법규에 따라 원격감시·제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원발생 이전에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원격감시·제어로 도로조명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의 양방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양방향 자동점멸기 설치를 위한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가로등과 공원등 제어함 내부에 우선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등 제어함에도 설치함으로써 현재 이원화된 채 관리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연수구 조명제어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통합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개선] 연간 정비계획 수립, 서면 시공지시 및 지급자재수불부 작성·제출 지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번호별 보수이력과 자재 입·출고사항 관리 등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의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자체 야간 순찰과 지역주민의 신고만으로는 고장난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원발생 이전에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원격감시·제어로 도로조명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권고

제 목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업무 소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역지원사업¹²⁾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 2018~2020년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미 작성,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미 기입, 하자검사 미 실시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태양광발전설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검토 필요

계양구 ○○과에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추어 에너지 공급체계를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의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역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2011년 계양구청을 시작으로 2021년 계산4동 행정복지 센터까지 총 00개소(총 설비용량 000kW)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확대 보급하여 관리

1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함.

하고 있다.

그러나, ○○과 ◇팀 내 직원 1명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등), 설치된 설비의 안전점검 및 발전량 분석·보고, 고장 수리 등 설비의 사후관리 외에 타 분야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다 보니 계양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설비 점검 용역 실시 외에 상시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동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사용부서(기관)로 관리전환 되지 않은 설비에 대한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에너지생산량 감소, 설비의 수명 단축,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그 실례로, 20**년 ㄴ수련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설비용량 15kW)가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약 0개월 동안 고장 알람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상에 표출하였으나 사용기관 담당자와 ○○과 담당자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고장점검 없이 방치된 채 관리되다가 금번 감사를 통해 인지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 완료되었거나 향후 설치 예정인 태양광발전설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¹³⁾)과의과의 연동이 의무화되어 한국에너지공단 표준 프로토콜이 적용된 RTU(데이터취득장치)를 설치하여 발전량,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 현황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도 동일하게 구축하여 ○○과에서 전체 설비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설비 사용부서(기관)로의 관리전환을 통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상시 점검과

13)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란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의 약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이 보급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상태 등을 표준 프로토콜이 적용된 데이터 취득장치인 RTU(Remote Terminal Unit)를 설치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 연장 및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비치,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기입, 정기·최종하자검사 실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의 연동 구축을 통하여 전체 설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설비 사용부서(기관)로의 관리 전환을 통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해당 설비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권고

제 목 공영(노외)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1. 4. 16.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843호)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친차”이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관내 00개소 공영(노외)주차장의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양구에서는 환친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예산 확보 및 같은 규칙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22.4.15.까지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2021. 7. 2.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환친차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설치예산 확보 및 경과조치 기한 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4호 단서조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계양구 ○○과에서는 관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주·박차 등 민원 분쟁 해소와 화물 자동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 ○○ □□공영차고지 확대조성공사(2단계)를 시행하였다.

1. 설계변경 검토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공사감독업무지침”이라 한다) 제13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48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역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과에서는 20**. **. **.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공영차고지 조성공사 00개 항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00개 항목)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접수하였고, 20**. **. **. “○○○○ □□공영차고지 확대조성공사(2단계) 실정보고 검토 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정보고 항목 중 □□공영차고지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포장면적 증가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신축줄눈 수량 또한 증가하였는데, 당초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신축줄눈 일위대가는 △△△ 시공, 설계도면에는 ▲▲▲ 시공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계 도서간 불일치 사항이 있음에도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고 설계자의 의견 조회 없이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업부지 북측 경계와 인접한 기존 콘크리트 농로(L=000m) 정비의 경우는 도로폭 확장 및 신규 측구수로관으로 우수 유도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00, T=00cm)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였는데 아스콘 포장은 연성 포장으로서 하부포장층에 강성포장(콘크리트층)과 연성포장(혼합골재층)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성포장층 구간에서의 침하 발생 우려로 콘크리트포장 철거 구간에서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하부포장층(기층)의 재료, 단면(두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준공 후 아스콘 포장 침하, 측구수로관으로 우수 미 유입, 물고임으로 인한 재료분리 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관급(지급)자재 관리 소홀

공사감독업무지침 제115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검측대장 등 10종류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주요 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등 15종류의 서류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15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사 책임 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 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5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사로부터 지급 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 후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지급자재 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서류 없이 관급자재를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수불부를 확인한 결과 자재별로 반입 연월일, 자재명, 자재규격만 작성이 되어 있고, 출고일자, 출고수량, 사용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물품검사(수) 조서 및 물품 상세만 있을 뿐 납품서 등 붙임 서류가 없어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급(지급)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품질시험계획 관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¹⁴⁾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제2항제1호: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 15)의 구분에 따라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¹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업무지침 제13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시험계획 시험대상은 토목공사 중 도로공사 분야에서 (1)흙 및 혼합골재는 0종 0개 시험종목, (2)아스팔트 포장은 0종

15) (제1호)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2호)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별지 제43호서식

00개 시험종목, (3)기타 분야 0종 00개 시험종목, 수공구조물공사 분야에서 0종 0개 시험종목으로 정하고 있고, 이 중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한 시험방법을 제외하고 현장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대상종목 또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20**.**.**. 기성검사 시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검사 성과 보고서에 노체는 계획 00회 대비 00회 실시, 노상은 계획 00회 대비 00회 실시함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실시 횟수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 **. **. 준공 검사 시에도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가 미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 없이 각각 기성검사 보고와 준공검사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성적서로서 품질을 확인하도록 계획된 시험종목 중 콘크리트 자재의 경우 관급자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16)」 제2장(일반콘크리트) 1.일반사항에 따라 레미콘의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레미콘을 현장에 반입할 때 ①레미콘 배합보고서, ②레미콘 현장 배합자료, ③레미콘 납품서, ④레미콘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받아야 검토·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4. 공사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업무지침 제120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당일 공사 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토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 **. 설계변경 검토 보고시 차고지 콘크리트 포장의 신축줄눈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일위대가: △△△ 시공, 도면: ▲▲▲ 시공)에 대하여 부등침하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차 감소 및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내부 검토 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치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검토)를 하지 않았고,

변경된 설계서에는 신축줄눈의 △△△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시 △△△(원형강재)가 아닌 ▲▲▲(이형 철근)를 설치하였음에도 신축줄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콘크리트 포장단면에 대한 구조검토, 또는 시공상 문제가 없을 경우 감액 설계변경 검토 등을 하지 않고 기성 및 준공 처리하였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영차고지 노체, 보조기층에 대한 시험(다짐, 함수비, 현장밀도)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부지 전체에서 설계강도가 균일하게 발현되는지 확인되도록 적정 위치, 간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성 및 준공서류를 확인한 결과 품질시험계획 대비 시험실행횟수가 부족하고 위치 선정에 대한 근거 기록이 없어 노체 및 보조기층이 전반적으로 설계강도가 균일하게 발현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기성 및 준공 처리함으로써, 부등침하 및 이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체 균열 등을 대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영차고지사업 준공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 포장면(구조물)에 부등침하 및 하중에 의한 균열,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균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과에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설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정산 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 미시공비 000천 원, ▽▽▽ 시공의 경우 ☆☆판거푸집(0회)이 아닌 ♠♠♠ 대체 시공으로 인한 000천 원, 안전 관리비 항목 중 ◆◆◆카메라, ♣♣♣측정기 각 0대 대비 각 0대 구입으로 인한 000천 원, 품질시험비 정산 000천 원 등 총 000천 원을 감액 처리하지 않고 사업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서류(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약 000천 원을 환수 등 조치하시고,

[주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 등 0개사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일반생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대행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 공고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20**년 ~ 20**년 생활·음식물·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00건의 계약(계약금액 : 000천원)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사업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 처리업자¹⁷⁾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계양구 ◆◆과는 각 00건의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문서 일체를 사업부서인 ○○과에 임의 이관하여 계약대장으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매월 지급하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대가 지급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등 회계 질서 확립을 소홀히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정산 미 이행

17)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으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입찰공고 등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르면 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위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 등 0개사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0년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20**년부터 20**년까지 00건의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위 회사들이 0년간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000천원 보다 적은 000천원의 보험료만을 부담하였음에도 000천원의 보험료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하지 못하는 등 정산 근거 마련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년에는 ○● 등 0개 회사와 00건의 대행용역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제8조의2(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 중 미 사용된 보험료는 정산을 통해 반납한다.”의 규정을 마련하고도 20**, **, 대행계약의 준공 당시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여, 20**, **, 까지 000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인적보험료 미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반납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①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대장 관리 및 대가지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이행에 따라 과다 지급된 000천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는 20**. **. **. 준공되어 운영·가동 중인 ㄷ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주)와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위탁운영 용역 감독업무 소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주요시설별 적정 운영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자로 지정된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20**년, 20**년 작성한 「ㄷ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법령 및 조례, 관련지침, 계약서, 과업지시서, 시설별 기본 및 실시설계서,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제안서)를 반영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위 사항에 기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2월 1일 기준 향후 1년간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양구 ○○과는 ㄷ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탁운영 업체에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주)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대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착수 후 1개월 이내와 매 회계 연도 2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과 유지관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유지 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여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 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조치 없이 월간보고만 받고 있는 등 용역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유입 및 방류수 관리 미흡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의견(2014. 4. 22.)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평가서에 제시한바와 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방류하되, 방류 하천의 목표수질 유지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ㄷ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자체 오·폐수처리시설 방류농도는 「ㄴ 하천기본계획(20**.**.)」에 설정된 ㄴ목표수질 “Ⅲ등급”에 맞추어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수의 방류수 수질을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으로 설정하여 계획하였고, 「ㄷ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유입 및 방류 수질을 계획하였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는 유입수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유입수 수질 분석결과 특정업체에서 고농도폐수 배출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전처리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정한 유입 수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양구 ○○과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일 이후 단지 내 유입되는 유입수와 방류수가 지속적으로 계획수질을 초과하여 방류수역인 ㄴ의 목표수질 유지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위탁 관리 용역사인 ◇◇(주)의 유입수질에 대한 실정보고 총 0회와 매월 월간업무보고서 상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정한 수질 확보에 소홀하였다.

3.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절차 부적정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따르면 시행자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에 따라 사용료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

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30호의5 서식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ㄷ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부담), 제15조(이의신청)에 따르면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고,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납부 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징수결정이라 하며, 징수결정은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만이 할 수 있고,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징수결정 시에는 징수결의서 작성(징수결정 사유 첨부), 징수부 등재 후 해당 납부 고지서를 발행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는 20**년 *월부터 20**. *월까지 사용료 000건(000천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기안·협조·결재의 과정 없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납입 고지하는 등 징수관의 징수결정이 없는 부과·징수 행위를 하였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7일전(조례에는 납기일 전 규정)까지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주)에 부과한 사용료 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20**. **월 초 이의 신청(전화)을 받아, 이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재 산정한 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징수관의 징수결정 없이 자의적으로 납부 기한 이후에 소급적용하여 20**. **. **. 전액 감면처리 하고, 같은 날 변경된 금액인 000원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납부기한을 임의로 정하여 납입 고지한 사실이 있고,

20**.**.**, (주)■■■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일반 문서로 접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기한 7일) 받아, 20**.** 감사일 현재까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민원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2019. 10. 15. 신설)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2018. 11. 16. 제정) 제15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례를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시설의 수질 관리와 위탁운영 용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환경보전법」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령과 상이한 조례 규정을 관련법령 등 검토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적기준점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 기준점 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 ○○과에서는 관할 구역 내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유지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의 보존상태,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전산시스템 자료 입력 등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양구 ○○과에서 실시한 지적기준점 조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20**년도 조사실적으로는 지적삼각점 총 0점 중 0점, 지적삼각보조점 총 00점 중 00점, 지적도근점 총 000점 중 000점 등으로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계양구 ○○과에서는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한 복구, 재설치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망실 확인된 ㄱ동 ***-#번지(지적도근점 명 00) 등 00점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기준점 표지 점검 및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 조속히 복구, 재설치 등의 후속 조치를 예산확보 등을 통해 조속히 이행하시어 지적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그리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ㄱ동 ***-*번지 등 가설건축물 000건에 대하여 감사기준일까지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존치기간이 만료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ㄱ동 ***-*번지 등 가설건축물 000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가설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¹⁸⁾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 2. 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비율을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18)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함.

경우 등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비율을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지침¹⁹⁾」(이하 「계양구지침」이라 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가 대상인 비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계양구지침」을 적용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라도 개별 유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25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이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산정비율과 다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초래하게 한다.

참고로, 계양구 ○○과에서는 2016. 2.11.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신규 부과 000건을 하였으며, 그 중 「계양구지침」을 적용하여 신규부과 0건, 신규부과계고 0건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산정비율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계양구지침」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양구지침」으로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에 대하여 향후 건축법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재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9) [시행 2018.11.2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규 제305호,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법 제19조의2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²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10, 제19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검사확인증과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관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000개소 중 정기검사·

20)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함.

정밀안전검사 미 실시 00개소, 검사확인증·기계식주차장치 이용안내문 미 부착 00개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 선임·보수교육 미 이수 00개소 등에 대하여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 [시정] ① 「주차장법」을 위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각종 검사의 실시·유도 방안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보수교육의 이수율 제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²¹⁾은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양구는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관련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계양구 ㄱ로 **번지에 위치한 ㄴ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쾌적한 정서생활을 제공하고자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계양구 ○○과는 ㄴ근린공원의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까지 「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ㄴ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공사 준공 도면과 19**.**.*.(인천광역시고시제 19**-**호) 변경 고시한 공원조성계획 도면을 비교 확인한 결과 ①ㄷ(1-1) 면적

2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권한의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공원 설치·관리 사무를 [별표1]에서 군구·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증가, ②르시설 2-7 철거 후 ㄱ시설 설치, ③ㄴ 철거 후 ㄷ 교체로 인한 휴양시설 면적 증감, ④ㅇ 광장1-1~광장 1-4구간 장송 식재에 따른 공원시설의 면적 변동 등 이에 따른 공원의 주요 경관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리모델링 조성사업 전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19**.**. 결정 고시 된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지형도면과 공원조성현황이 불일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설치·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없이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녹지점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녹지에서 다음 각 호²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변경 포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변경 포함)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23조(정의) 제2호에 따라 녹지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의 한 종류이다.

같은 법 제34조(세율) 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종별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22) ①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④ 흙과 돌의 채취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²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녹지점용허가는 제2항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면허에, 산지전용허가는 제3항에 따라 한 번만 부과하는 면허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1항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2(면허에 관한 통보) 제1항 관련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3)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제2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는 녹지점용과 산지전용을 허가(변경 포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에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면허 부여 등의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계양구 ○○과에서는 00개소의 녹지와 000ha의 산림을 관리하면서 녹지점용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20**부터 20**까지 녹지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면허 부여 사실을 등록면허세 업무 담당부서인 계양구 ○○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녹지점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녹지점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면허 부여 등의 사실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녹지점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 부여 등의 사실 통보 및 면허세 납부 확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ㅈ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계양구 〇〇과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20**.**.*.부터 20**.**.*.까지 「ㅈ 조성사업」을 시행·완료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주요자재 수불부 및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등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면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독조서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 서류²⁴⁾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1)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2)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에서 시행한 Z 조성사업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착수, 공사의 시공, 공사의 준공, 공사 준공 후 등 각 단계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양구 OO과에서는 20**년도 Z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규격에 미달²⁵⁾되는 소나무 00주를 식재하였음에도 재시공 또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준공한 결과 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소나무의 병해충 예방과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내역서에 황토마대 2겹 감기를 반영하고도 부분적으로 1겹으로 시공하였고 원활한 활착을 위해 설치한 물주머니로 인하여 근원부의 황토마대가 유실되는 등 공사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는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검사 처리하는 등 관련규정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4) 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② 시공 후 매물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④ 발생품 정리부 ⑤ 그 밖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25) 설계도서 특별시방서 2.2.3. 규격: 수목재료 규격의 허용오차 -5%~1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시정] 규격 미달 소나무 식재로 인한 부당지급액 000천원을 환수하고 부실시공 된 황토
마대감기를 공사계약 내용대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설공사 자재검수와 준공검사 등 공사감독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ㄸ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1.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계양구 〇〇과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놀이 및 여가기능 제공을 위하여 ㄸ 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²⁶⁾은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양구에서 ㄸ 근린공원(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양구 〇〇과는 ㄸ 근린공원에 대하여 20**.**.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20**.**.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ㄸ 근린공원(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부 실효됨에 따라 ㄸ동 **-** 등 0개 필지

2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권한의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공원 설치·관리 사무를 [별표1]에서 군구·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000m²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 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익시설인 주차장의 위치에 마사토로 포장한 운동시설을 조성하였고, 공원 내 산책로의 동선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 20**.

** .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2.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등 보상업무 관련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같은 법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따르면 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준용)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공익 사업의 개요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을 통해 도시공원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고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은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따르면 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²⁷⁾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등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 ○○과에서는 ‘ㄷ 근린공원(2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ㄷ 근린공원(2단계) 토지 보상(협의)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손실보상계획에 따른 열람 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의 ㄷ 근린공원(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편입용지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ㄸ동 **~**를 제외하고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공원을 조성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27)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

미조성 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계획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인 ㄷ 근린공원 조성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주의]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시고 ㄷ 근린공원(2단계) 미조성 부지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계양구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적극행정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공원녹지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갈현체육공원은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묘지등의 점유로 훼손된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
- 규 모 : 45,895㎡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소요예산 : 16,136백만원 (국 1,735, 시 5,060, 구 5,841, 교부금 3,500)
- 대상지 현황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공원 전체면적 포함)
 - 지 형 : 산지형으로서 다량의 절·성토가 수반되어야하는 지형임
 - 소유현황

구분(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농어촌공사
45,895㎡	801	3,297	23,697	16,876	1,224
100%	1.7%	7.2%	51.6%	36.8%	2.7%

- 지 장 물 : 분묘 1,193기(유연 910기, 무연 283기)
- 경작면적 : 17,292㎡
- 기 타 :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발굴조사 대상지로의 확대(유물출현 등)

□ 사업성과

- 본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분묘 1,193기의 분묘 이장과 각종 지장물 및 문화재 발굴대상지로의 결정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사업장이었으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및 각종 행정절차 병행 이행을 통한 조기 사업 마무리 달성(붙임 : 추진 현황)

□ 기대효과

-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가치 제고

[붙임 1 : 각종용역 및 행정절차의 병행추진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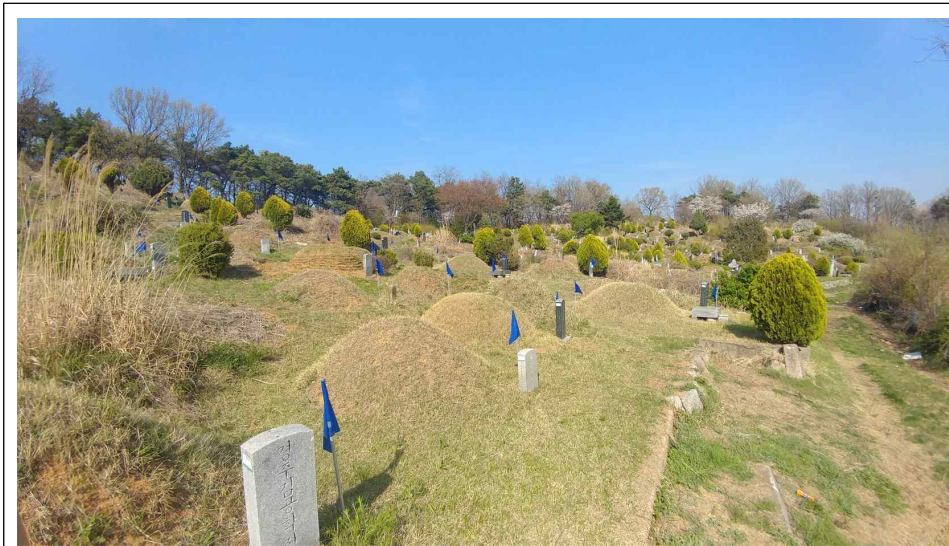
일련 번호	구 분	2018.1	2018.3	2018.6	2018.9	2018.12	2019.1	2019.3	2019.6	2019.9	2019.12	2020.3	2020.6	2020.9	2020.12	2021.3	2021.6	2021.9	비고
1	기본계획																		착수 및 완료
2	GB관리계획 입지 협의																		국토부
3	GB관리계획 입지협의(변경)																		연면적 증가
4	분묘보상 및 이장																		공고 및 이장
5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착수 및 결정
6	공원조성 계획 결정																		공고 및 결정
7	재해영향 평가(행정)																		검토 및 이행
8	재해영향 평가(개발)																		검토 및 이행
9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및 이행
10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																		설계작성 및 인가
11	문화재 표본조사																		이행
12	문화재 발굴조사																		조사 및 완료
13	설계 VE 및 계약심사																		검토 및 이행
14	토지보상 및 수용																		보상 및 수용

※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 보상등의 업무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병행이행함**으로 사업기간을 **현격하게 단축**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모든 사업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갈현체육공원을 탄생시킨 것으로 판단됨.

15	공사 시행																		20.8 ~ 21.9
----	-------	--	--	--	--	--	--	--	--	--	--	--	--	--	--	--	--	--	----------------

※ 주요공정 : 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BF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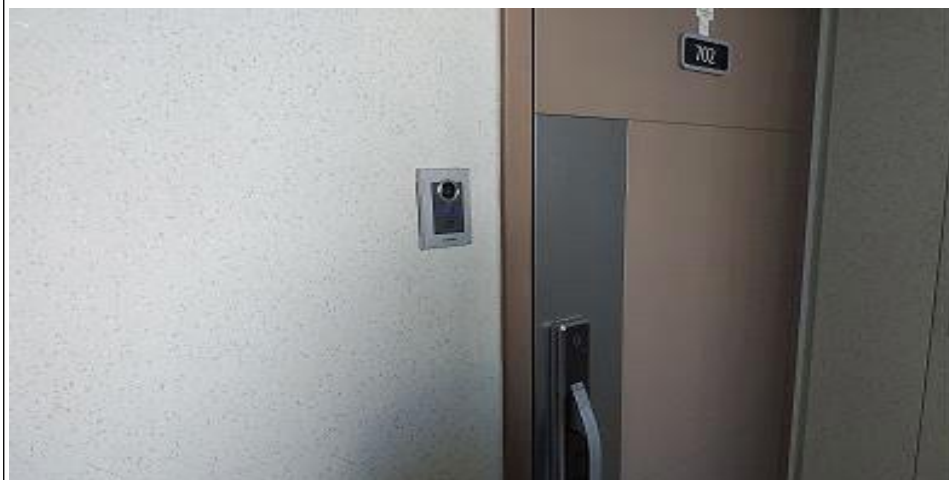
[붙임 2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관련 자료 - 분묘이장]



이장 홍보를 위한 깃발 설치(2018년)



이장완료 확인 및 중복 이장방지를 위한 표시 실시



미이장 분묘 연고자 가정 방문 실시



분묘 이장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



공사진행 중 발생 무연유골의 신속한 처리 노력



공사중 유연주장 유골 발생에 따른 임시안치
(파주 추모공원 임시 안치 후 유전자 감식실시)



조성 전 전경



조성 후 전경

※ 토지 보상의 경우 소유자 가정 방문 협의 및 방문 계약 실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농지개량) 행위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따라 성토 행위 전 사전 높이 표시 말뚝 설치 및 배수로 조성 등을 지도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관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일원
- 사업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목록에서 성토공사 대상사업을 사전에 확인하여 성토 행위 전 사업 관계자와 현장에서 배수로 조성 및 성토 높이 등을 현장상황에 따라 지도

□ 사업성과 및 운영

- 성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농업기반시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성토 관련 피해 민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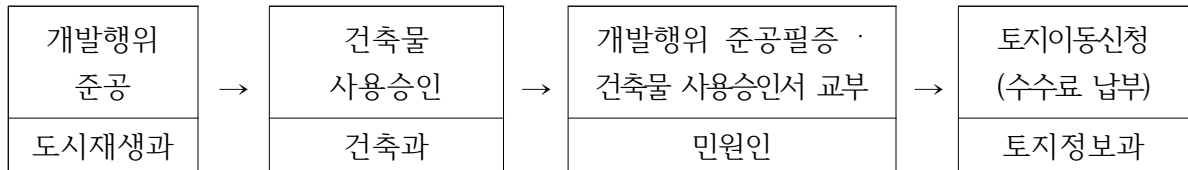
□ 기대효과

-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사후 단속 시 발생 민원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후속 민원이 사전 현장지도를 통한 민원 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농업 기반 시설 피해 및 주변 농민들 간 갈등 감소
- 전국 최초 사전 현장 지도를 통해 매년 휴농기에 발생하는 연쇄적 성토 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추진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 시 각 부서(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 복잡한 민원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 토지이동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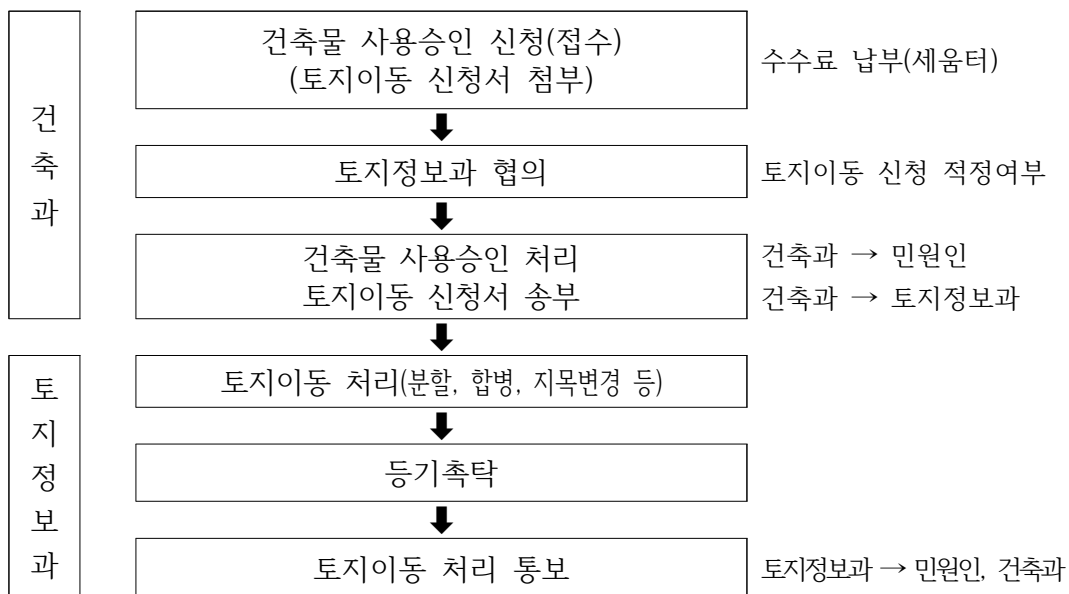
- 의무가 아닌 신청주의인 토지이동 절차로 인하여 토지이동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까지 침해 받는 상황이 발생됨

□ 사업개요

- 건축물 사용승인과 토지이동을 동시에 처리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 시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축탁까지 완료

- 업무 흐름도



□ 사업성과 및 운영

-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이동 100% 달성
 -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실시 이후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 단 한건도 누락되지 않고 토지이동을 완료함

구분	건축허개(신축)	토지이동현황		비고
		합병	지목변경	
2020년	83건	9건	22건	
2021년	80건	5건	22건	

□ 기대효과

- 토지이동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구민 만족도 제고

〈보도자료〉

신아일보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11면

계양,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시 계양구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해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계양/박우용 기자 cyj0503@hotmail.net

일간투데이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10면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관동서 기자 jcs95@today.co.kr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해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신문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 계양구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준공 시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구청에 방문해야 하

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준공 완료와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원스톱서비스로 그간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공적 민원에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07면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kjk8

아시아타임즈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13면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인천 계양구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기자 jee-03@hotmail.net

내외일보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03면

계양구, 건축물 사용

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해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김성규 기자 ksg@newseilbo.com

2020년 03월 12일 (목)
수도권 05면

시대일보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시행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박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확

박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복숙기자 bslee@sidaeilbo.co.kr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용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수 기자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 계양구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용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반복적이고 중복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

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용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수 기자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실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용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jonghapnews.com)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승인 동시에 등기확약까지 완료

인천시 계양구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분할·합병·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평창수기자
<mchs@jeonmae.co.kr>

계양구,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행

계양구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토지이용(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접수)할 때 토지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토지정보과에 통보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토지이용 및 등기확약까지 완료된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용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구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과 처리기간이 길었다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과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오선미기자

수범사례 4 영월의 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계양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영월군과의 우의증진 및 상호 발전을 기리고자 영월의 숲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산9-11번지 일원
- 면 적 : 1,330㎡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내 용 : 수목 식재 및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물 설치
(소나무 외 17종 25,855본, 벤치 4개소, 평상 2개소 등)
- 조성기간 : 2021년 5월 ~ 8월
- 주 관 : 영월군

□ 사업성과 및 운영

- 계양구 산림욕장내 영월군에서 조성비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양구 예산 절감에 기여
- 묘지 이전 후 쓰레기 무단 투기, 무분별한 등산로 발생 등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던 임야에 영월소나무, 동강할미꽃 등 초화류 식재로 경관향상 및 주변 환경 개선은 물론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휴식·휴게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기대효과

- 영월군의 향토수종 식재 등으로 특화 숲을 조성하여 출향민 등에게 고향의 향수와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영월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홍보 효과 발생
- 장기간 훼손되고 방치된 산림에 “영월의 숲 조성사업” 추진함으로써 계양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특색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

□ 현황사진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